

부모급여에 대한 기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세아를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1세아 가정에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이를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또다시 경신했다. 저출산이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OECD평균이 1.6인 것을 보면, 한국의 출산율 0.7대는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분명하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출산은 예방접종처럼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개입은 필요하고 또 정당하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시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준다. 또 아이 양육 때문에 늘어난 가계지출을 상쇄시켜준다. 돈 준다고 아이 낳느냐는 냉소도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는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가계지출 증가라는 이중고가 발생한다. 이 이중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출산 기피를 막기 어렵다. 희망 자녀수는 2명이다. 그러나 실제 1명도 낳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첫 걸음은 아이를 갖는 기회비용을 낮춰주는 데 있다.

한국은 그간 저출산 대책으로 공보육에만 의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0세아와 1세아 영아의 취업율은 OECD국가 최고이고, 3세아 취업율도 94.1%로 공보육이 발달한 북유럽 수준이다. 그런데 사회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보육만으로는 안 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발달해서는 소용없다.

일찌감치 사회정책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을 보자. 공보육을 일찌감치 발달시켰다. 또 부모보험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7.6%에 이르는 높은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 합의로 기업 차원에서 10~20%의 부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거의 100%에 이른다.¹⁾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보험시스템이기에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1) 허민숙(2021).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발생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미취업 청년, 자영자 등에게는 일반재정을 통해 정액의 기본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낳은 전국민에게 관대한 소득보장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대륙의 저출산 국가 독일도 우리처럼 2003년 출산율 1.3 쇼크를 경험하였다. 이후 스웨덴을 모델로 삼겠다고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고, 공보육뿐만 아니라 소득대체 개념의 전국민 부모수당(Elterngeld)을 도입했다.²⁾ 독일의 부모수당은 일반재정에서 운영되는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이지만, 정액이 아니라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한다. 소득대체율은 최저 65%에서 최대 100%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를 적용한다.³⁾ 공보육에만 치중했던 한국과 달리, 독일은 출산율을 1.6까지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도 출산/육아기 소득보장제도로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어, 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수급권이 있어도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용한다 해도 직장 복귀를 서두른다. 회사 눈치가 보여 그러기도 하지만, 소득상실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하다. 소득대체율도 낮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도 월 15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보통 남성)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보통 여성)가 쓴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를 넘는 스웨덴과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다.

한국에서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일단 사각지대가 전부 사라진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최소한 월 100만원씩 1년이 보장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소득대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부모급여 100만원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50만원 더해지면, 최대 250만원이 된다. 월 400만원 받는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종전의 37.5%에서 62.5%로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소득상실 때문에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던 마음은 상당부분 약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유연성, 개방적 이민제도, 주거 안정성, 다양한 결합형태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 부모급여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었던 소득상실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 박은정(2019).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7-221.

3) 양재진, 유란희, 장우윤(2021).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설계. 육아정책연구, 15권 3호, pp. 3-27.